

이슈브리프 855호
(2026. 6.18)

한-아프리카 협력의 현주소와 과제 :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제855호

김윤희 yunheekim@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6월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54개국과 4개 지역기구(AU, AfDB, AfCFTA, AU CDC)를 초청해 서울에서 첫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책임강국과 외교 다변화 구상의 연장선에서 공급망, 핵심광물, 해상 운송로를 중심으로 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24년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2026년 외교장관회의로 협의 수준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2029년 정상회의 개최 추진 등 한-아프리카 외교의 제도적 틀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아프리카 협력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한-아프리카 관계는 196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과 함께 수교가 시작된 이후, 냉전기 체제 경쟁의 무대에서 점차 실리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수십 년의 제도적 축적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온 중국의 FOCAC, 일본의 TICAD와 비교할 때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규모와 현지 외교 네트워크, 그리고 이행 점검 체계는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많다. 특히 아프리카 관련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 부재, 상주 공관 부족, 민간 기업 참여 유인 미흡 등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아프리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신흥시장 개척, 다자외교 지지 기반 확보라는 세 축 모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전략, 충분한 자원, 그리고 체계적 실행 구조는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본 보고서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핵심광물 보유국과 해상 운송로 거점국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상주 공관 확대와 지역 전문가 육성, △제3국과의 삼각 협력 활용, △EDCF 기반 K-파이낸스 패키지 구체화, △범정부 대아프리카 전략의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키워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글로벌 책임강국, 외교 다변화, 공급망, 핵심광물

2026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이 남았는가?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는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54개국과 4개의 주요 지역기구(AU, AfDB, AfCFTA, AU CDC)를 초청해 개최한 외교장관급 회의다. ‘글로벌 전환기 속 공동 대응을 위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아프리카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불안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본회의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 1에서는 교역, 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디지털, 식량안보, 공급망 등 경제협력 의제를 다루었고 세션 2에서는 개발 협력, 기후 변화, 보건 안보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프리카 측은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과학기술 역량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다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해상항로와 핵심 광물에 관한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이 세계 경제, 특히 아프리카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해상 운송로와 핵심광물을 포함한 자원 측면에서도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24년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기반으로 기술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핵심광물 협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제도적 협의 틀 안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 이행 점검 성격도 겸한다. 2024년 정상회의 공동선언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에 합의하며 공급망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 외교장관회의는 이 성과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으며 2029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추진도 논의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대아프리카 외연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2026년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아프리카에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며 삼각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만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과 이행 체계 설계는 아직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조율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왜 아프리카에 주목하는가?

현 우리 정부 대외전략은 외교 지평을 확장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54개국으로 구성된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축이자 동시에 외교 다변화와 신흥시장 개척이 시험 되는 무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 장관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외교 다변화 구상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또한 이번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서 해상 운송로와 핵심광물이 다시 핵심 의제로 강조된 점은 공급망 협력이 한-아프리카 관계의 중심축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잠재력은 주목할 만하다. 인구 증가, 급속한 도시화, 소득 수준 향상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프리카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로 평가된다. 특히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건설, 에너지, 통신, 디지털 인프라,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AI, 에너지, 방산, 인프라를 주요 대외경제 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는 이러한 신산업 및 전략산업 외교가 시험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다자외교 측면에서도 아프리카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엔을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보건, 식량안보, 개발 협력 등 글로벌 의제에서 점차 더 큰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기후, 보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같은 의제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의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원조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성장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러한 경험은 실질적인 참고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는 한-아프리카 협력을 단순한 원조 관계가 아닌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자리매김하는 근거가 된다.

한-아프리카 관계의 변천과 현주소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에티오피아와의 우호 관계에서 출발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는 초기 한-아프리카 관계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국가였다. 그러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기 한국 외교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동맹국에 집중되었고 공산권과 제3세계 국가와의 접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시기 아프리카는 한국 외교 지형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는 점차 실리적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범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과의 개발 협력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연합(AU)이 출범했다. 이후 한국은 아프리카를 13억 인구를 가진 대륙 단위 시장이 형성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장과 자원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5년 한국 정부는 AU 옵서버 국가 지위 획득을 통해 AU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2006년에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ODA 확대, 신기술 교육, 감염병 대응, 무역 확대, 한-아프리카 포럼 정례화를 포함한 다섯 가지 중점 목표를 제시했다.

이 시기 대아프리카 전략의 목적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에너지 안보 이슈 속에서 자원, 에너지 확보의 새로운 축 마련이다. 또한 아프리카를 새로운 수출시장과 해외 건설, 인프라 시장으로 개척, 그리고 개발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 배출과 대외 위상 강화를 위한 다자외교의 하나로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구상과 자원외교의 목적으로 KOAFEC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는 등 경제협력 중심 접근을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 국제화와 개발 협력 브랜드 확산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았다.

그런데도 2010년대까지 아프리카는 한국 외교에서 주변부 위치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대아프리카 ODA와 투자 규모는 중국, 일본에 비해 제한적이었고 대규모 정상회의나 장기 전략 문서 수준에서 아프리카를 다룬 사례도 많지 않았다. 다만 KOAFEC 등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점진적으로 넓혀왔으나 그 성과는 미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6월 한국이 첫 한-아프리카 정상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외교장관회의로 이를 이어간 것은 한-아프리카 관계가 주변부에서 핵심적인 협력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를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중국은 2000년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출범시킨 이후 3년마다 정상회의와 행동계획을 통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제도화해 왔다. 인프라 건설과 자원 확보를 연계하고 부채 외교를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중국은 아프리카 내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반면 일본은 1993년 아프리카개발 국제회의(TICAD)를 출범시켜 30년 넘게 대아프리카 개발 협력을 펼쳐왔다. 인적 자원 교육과 질적 성장 촉진에 중점을 두며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에서 상위권 지분과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누적 20~3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이 단일 FOCAC, TICAD 패키지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한국이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아프리카에 중국과 일본에 이은 또 하나의 협상 파트너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은 FOCAC, TICAD와 차별화된 협력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아프리카 관계의 구조적 한계와 제언

외교적 형식과 제도 설계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는 빠르게 체계화되고 있다. 2024년 정상회의 이후 고위관리회의(SOM)를 통한 후속 점검이 이어졌고 2026년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협의 수준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나아가 2029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정상, 장관, 그리고 실무로 이어지는 정례 협의 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아프리카 협력이 의지와 실현 사이의 간극을 충분히 좁히지 못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2024년 정상회의와 2026년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정치적 관심과 제도적 틀은 빠르게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실질 사업과 지속가능한 성과로 연결하는 기반은 아직 충분히 공고하지 않다.

첫째, 자원 규모와 투입 구조의 한계다. 아프리카는 한국 개발 협력에서 중요한 대상 지역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대아프리카 ODA와 투자 규모는 중국과 일본이 FOCAC과 TICAD를 통해 제시하는 대규모 패키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머물러 있다. 자원 규모 뿐 아니라 개발금융, 수출금융, 그리고 민간투자를 어떻게 패키지로 설계해 구체적 프로젝트로 연결하느냐가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한다.

둘째, 현지 외교 및 경제 네트워크의 부족이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재외공관은 170여 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프리카 54개국을 충분히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 다수 국가에서

인근 국가 공관이 검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현지 정치 및 경제 동향 파악, 기업 지원, 위기 대응, 유망 사업 발굴 등을 상시적이고 밀착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셋째, 대아프리카 전략 및 이행 체계의 제도화 과제다. 중국은 FOCAC을 통해 3년마다 행동계획과 자원 배분 구조를 축적해 왔고 일본 역시 TICAD를 통해 장기적인 개발 협력 로드맵과 이행 점검 체계를 운영해 왔다. 반면 한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고위급 협의 틀을 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범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중장기 전략 과제, 국가별 및 분야별 세부 로드맵, 독립적인 이행 점검 등의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단기 부처별 사업에 그칠 위험이 있다.

넷째, 민간기업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내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부족,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 높은 금융 조달 비용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를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인식한다. 정부 차원의 리스크 분담 장치와 금융 지원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민간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다섯째,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의 취약성이다. 과거에도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가 여러 차례 강조되었음에도 정권 변화에 따라 연속성 있는 정책이 펼쳐지기 어려운 환경이 반복되었다. 한-아프리카 협력이 특정 정부의 외교 이벤트를 넘어 장기적인 외교 기조로 정착하려면 제도화된 연속성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54개국 전체를 같은 수준으로 상대하기보다는 정부가 이미 강조하고 있는 공급망, 핵심광물, 해상 운송로 협력의 관점에서 △핵심광물 보유국,

△해상 운송로 거점국, 그리고 △역내 경제 허브 국가를 중심으로 파트너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 이들 국가에 외교, 개발 협력, 민간투자, 그리고 기술협력을 패키지로 결합해 집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이 위의 세 가지 축의 전략적 중요성을 명시한 만큼, 중점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희망형 공급망 협력 축을 설계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내 상주 공관 확대와 대아프리카 전문성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신규 공관 설치와 기존 공관 기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지 정세, 광물, 에너지, 개발금융, 다자협력에 밝은 지역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공관,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제3국 및 다자 파트너와의 삼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중국과 일본 수준의 재정 규모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 이번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협력 구상처럼 향후 유럽연합, G7, AfDB 등과 연계해 채원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조된 해상 운송로, 공급망, 인프라 협력은 한국의 기술력과 유럽 및 다자기구의 금융,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를 결합한 삼각 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여지가 크다.

재원 측면에서는 EDCF를 중심으로 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대아프리카 협력의 실질적인 도구로 구체화해야 한다. 2025~2027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은 공급망 협력, 아프리카 지원 확대, 초대형 고부가 사업 발굴, 민관협력전대차관 및 보증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용할 때는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핵심 사업을 우선 프로젝트군으로 설정하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수출금융, 그리고 민간투자를 결합한 K-펀드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향후 필요하다면 다자개발은행과의 공동 금융 구조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함으로써 외교적 합의를 실제 사업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아프리카 전략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KOAFEC, 그리고 EDCF 사업을 서로 분리된 채널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아프리카 전략 아래에서 연계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협력 구상과 개발금융 확대 전략이 지속가능한 외교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2024년 정상회의와 2026년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그러나 의지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재원, 네트워크, 이행 체계, 정책 연속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력 의지와 실현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것이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